

## 기말고사 2주로 연장, 비대면 방식도 허용

공정성 확보 전제로 비대면 허용  
강의실 확보로 인한 일정 변경  
양 캠퍼스 “비대면 시행” 주장  
학교 “운영지침 마련 중”

장보경 기자 jbg9687@khu.ac.kr

1학기 기말고사 시행 방식과 기간이 변경됐다. 일부 비대면 시험을 허용하고 시험기간은 기존 1주에서 2주로 늘어났다. 학교는 시험 공정성과 구성원 안전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양 캠퍼스 총학생회(총학)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학교의 결정에 우려의 뜻을 밝혔다.

지난달 26일 교무처 학사지원팀은 기말고사에 대해 “대면 시험 실시를 원칙으로 하지만 비대면 시험도 허용한다”며 “공정성 확보를 전제로 교강사가 자율적으로 평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강사의 재량에 따라 일부 기말고사는 비대면 시험이나 과제물 제출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우리학교는 지난달 11일 “기말고사는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며 “외국에 체류 중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 등 대면 시험이 불가능한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면 시험에 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태원 유흥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비대면 시험을 추가로 허용한 것이다.

기말고사 기간도 늘어났다. 학사지원팀은 “기존 시험기간에서 1주가 추가됐다”며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총 2주간 기말고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강의실 현황을 고려해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시험기간이 변경돼도 수업일수는 총 15주로 동일하다. 학사지원팀은 “생활



지난달 28일 서울캠 총학은 등록금 반환 및 학사대책에 대한 교육부와 대학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중앙도서관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했다.

(사진=장보경 기자)

속 거리두기 지침’에 의거해 학생 간 거리를 최소한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며 “강의실 확보를 위해 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실현·실습 강좌의 경우 5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하는 집중이수 기간 중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으며, 성적 입력기간인 7월 13일부터 15일까지도 시행 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비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험기간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학교 양 캠퍼스 총학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기말고사 비대면 시행을 원칙으로 재공지해 비대면 시험을 유도해야 한다”며 “비대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시험 중단 시 그 이후 예정된 시험에 대한 대책과 지방 및 해외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주거 문

제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의과대학이 기말고사 대면 시험 시행을 결정한 것을 두고 최선묘(의예 2019) 씨는 “대면 시험을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대책이 확실히 마련돼야 한다”며 “학생 간 거리두기나 전신 소독 등 철저한 예방 수칙 또한 필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면 시험 시행에 앞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의 A 씨 또한 “대면 시험기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궁금하다”며 “학교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A 씨는 “시험기간 코로나19 교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캠퍼스(서울캠) 학사지원팀은 “시험기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교강사에게 비대면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안내했다”며 “대면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시험이나 과제물 평가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캠퍼스(국제캠) 학사지원팀은 “코로나19 종합상황실에서 기말고사 운영지침을 마련 중”이라며 “운영지침에는 확진자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진행 상황이 유동적이므로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대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각 지역으로부터 많은 학생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시험을 치르는 것은 시가상조라는 입장도 있다. 선일균(경제학 2014) 씨는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을 감수하고 대면 시험을 치르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히 지방 거주 학생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면 시험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 씨는 “공정성을 위해 대면 시험의 원칙을 고수하기보다는 비대면 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법을 찾

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서울캠 학사지원팀은 “비대면 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바탕이 돼야 한다”며 “비대면 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의 소지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식을 교강사와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제캠 학사지원팀은 “정해진 시간 내 상반신 웹캠 촬영 병행, 오픈북 서술형 평가 시행 등에 대해 교강사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서울캠 총학은 “기말고사 대면 원칙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학교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학교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며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열린총장실 집중 온라인 공동행동’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총학은 기말고사 비대면 원칙,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공개요청서에 대한 답변 등을 요구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등록금 반환 및 사용내역 공개와 기말고사 비대면 원칙 등을 요구하며 피켓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 중단됐던 기관토폴, 국제캠에서 5월 28일 재개

김가연 기자 rkds0617@khu.ac.kr

코로나19로 중단된 기관토폴 시험이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 재개됐다.

지난 4월 7일 국제교류처는 “국제캠퍼스에서 시행되는 2020 상반기 기관토폴 일정이 5월 28일 재개된다”고 안내했다. 기관토폴은 학교 기관에서 실시하는 토폴 시험으로 이를 통해 자신의 예상 토폴 점수를 가늠할 수 있다.

국제교류처는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됐고, 2021-1학기 파견 교환학생

준비 및 졸업인증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시험을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며 시험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제교류처는 코로나19 사태로 2020 상반기 기관토폴 일정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수험생들은 필요에 따라 ‘Special Home Edition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Special Home Edition 서비스는 필요한 장비와 환경을 갖춘 후 집에서 시험을 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강의실 방역, 거리 유지 등 코로나19 대응책도 마련됐다. 국제교류처는

“코로나19 종합상황실과 협의해 지원 인원 4배 크기의 강의실에서 최대 거리를 유지한 채 시험을 치렀다”며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마스크 배부, 시험 전 후 강의실 방역, 손 세정 후 1명씩 퇴실 등의 대책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서울캠퍼스(서울캠)는 아직 2020 상반기 기관토폴 일정을 공지하지 않았다. 서울캠 국제교류처 서민희 직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기관토폴 일정이 보류됐다”며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시험 재개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 지면안내

####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집

마흔 번째 5.18, 마흔 번째 행진곡  
5월의 청년들, ‘들불야학’에서 ‘투사회보’까지

» 4면  
» 5면

#### 연재기획 - 청년정치는 가능한가

소외받는 비서울 비대학생, “인서울 대학생만 청년?”

» 6면

#### 기획

비대면 강의 확대, ‘토론’ 중시한 후마 교육은 어떻게?

» 8면



시선

사설

상생 요구되는 지역 공동체

대학이 지역경제가 고통 받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지연된 탓이다. 학생들이 주 고객인 대학이 상점의 특성상 매출은 방학보다 학기 중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대면 수업일이 계속 미뤄지자 지역 유동인구는 늘어나지 못했고 매출 감소로 직결됐다. 외식업, 서비스업 등 학생들과 직접 대면해 영업하는 업종에서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났다.

대학이 지역경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열악한 상태였다.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 회기동 자영업종 과밀도는 ‘위험’ 단계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경계단계인 ‘주의’보다 높은 경고 수준이다. 현 상황처럼 수요가 줄어들면, 경쟁이 과열된 지역이니 소상공인들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생 자영업자 생존율 또한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이었다. 막 창업한 자영업자들의 1년 생존율은 66.5%를 기록했다. 수치는 해가 지날수록 매년 떨어져 5년차 자영업자 생존율이 27.3%에 그쳤다. 이는 시 전체 평균보다 많게는 10% 이상 낮은 수치다. 코로나19의 여파까지 반영된다면 추후 대학이 지역경제 전망은 더욱 어두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움직임이 우리학교에서도 시작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지난달 20일 지역사회단체와 학생들이 임대로 인하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현수막을 붙여 임대로 인하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줄어든 매출에도움이 되고자 포장 및 배달이 가능한 가

게들을 지도로 제작해 홍보하는 활동도 포함됐다. 추후 상점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 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일도 계획 중에 있다고 했다. 이는 공동체가 협력해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어려움을 함께 타개하고자 시작된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캠페인이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관계 속에서 유대를 강화했다는 점은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이점일 것이다. 때론 어려움을 나누고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소비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넘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한 시작이다.

다시 방학이 가까워오고 있다. 코로나19는 확산과 감소 추세를 반복하며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얼어붙은 지역사회가 활기를 되찾기 위해선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지역 사회에 건네는 온정의 손길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어져야한다.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여 들어보자. 작은 도움부터 실질적으로 그들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방안 또한 계속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대학가에 지역 상생을 위한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대학과 지역사회는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불가피한 재난 상황에서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이 동반된다면, 도래한 위기를 조금이나마 더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성별을 떠나’ 능력대로

세시봉

문하령 <국제뉴스팀장>



여성에게 견고했던 국회의 유리천장에 작은 균열이 일었다. 국회의 73년 만에 여성 부의장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김상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오는 6월 본회의 표결이 남았지만 사실상 확정 상태다. 불과 20여 년 전 15대 국회 여성 의원이 전체 299명 중 9명으로 3%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성과다. 그동안 여성의 과소대표를 해소하기 위해 나름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국회 의장단에 여성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의 과소대표를 완화하기 위한 논의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한국 사회의 학연, 지연, 혈연의 카르텔을 끊어내려는 움직임 속에서도 성별의 영역은 좀처럼 수용되지 않는 모양새다.

실제로 지난 17대 국회부터 꾸준히 여성 부의장 선출을 위해 여성 의원들이 힘을 모았지만 남성 의원들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늦게 여성 부의장이 나오게 됐다. 함께 제안됐던 상임

위원장 여성할당제 역시 이견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러한 이견은 대부분 “대표 선출은 ‘성별을 떠나’ 정해야 한다”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유를 근거로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합리적’ 판단이 바로 유리천장이다. 우리는 아직 성별 격차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2020년 세계성 격차 지수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성 격차 지수(GGI)는 153개국 중에서 108위에 그친다. 이전보다 여권

“  
여성 의원이  
지금 추세대로 늘어나면  
2086년 총선이 돼야  
성비 균형이 맞춰진다

신장이 이뤄졌음에도 좁혀지지 않은 성별 격차는 여성 의원들이 여전히 비주류에 머물러 있다는 방증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성별을 떠나’라는 것은 또 다른 성별 격차를 허용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할당제는 성별 격차를 좁히는 조치가 선행돼야 의회 내 여성 비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했다. 특히 국회는 대의기구

로서 다양한 사회 집단의 대표성을 가지려면 각 집단의 구성을 반영해야 한다. 비당사자는 자의적이거나 시혜적으로 문제를 인지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없었다면 여성 부의장을 맞이하는 것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지도 모른다. 지난 2004년 ‘비례대표 50% 남녀교호순번제’로 여성 의원의 수가 대폭 늘어 이번 국회에서는 19%(57명)에 이르렀다. 역대 최대 여성 당선자 수지만 이마저도 국민 성비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 여성 의원이 지금 추세대로 최대 2%포인트씩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약 2086년 총선이 돼야 성비 균형이 맞춰진다.

초기 여성할당제는 강제이행규정이 없어 이수만 촉발시키고 이후 총선에서는 허울로만 남아있었다. 이에 지난 2008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고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의 취지가 비로소 달성될 수 있었다. 반면, 지역구 여성할당제는 아직 의무화되지 않아 대부분의 정당이 정해진 여성 할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이번 총선 역시 그랬다.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15.7%로 여성 의원 비율보다 낮은 상황에서 의무화되지 않은 여성할당제는 유명무실해졌다. 제도가 그 값을 못하고 있는 지금, 국회는 두텁고 단단하게 쌓아올린 유리천장을 스스로 무너뜨려야 할 때다.

상처 가진 땅에서, 당신의 장례를 치르기까지

취재수첩

김지원 기자  
kjh990327@khu.ac.kr



폭력은 상처를 남긴다. 몸과 마음뿐 아니라 공간에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취재를 위해 방문한 광주가, 상처를 안고 있었다.

귀찮을 법도 한 기자의 길거리 취재, 그러나 ‘5.18’이라는 단어에만큼은 모두가 일관된 반응을 보였다. 어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바빠 움직이던 시민들의 발걸음이 거짓말처럼 멈추는 게 그 것이었다. 곧 취재수첩에는 “그때 내가...”, “그때 우리 딸이 막 돌 지났었는데...”, “그때 저희 삼촌이요...”로 시작하는 각양각색의 사연이 적혔다. 시민들은 손가락을 헤아리는 노력도 없이 당시의 나이부터 그날의 일정, 목격한 사망자의 인상착의까지 아주 세세한 기억들을 마치 어제 일처럼 들려주었다. 미처 적지 못한 손짓과 발짓, 어느새 선 핏대, 잠진 목소리는 그들의 기억이 얼마나 생생한지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알 수 있었다. 그들에게 5.18은 내 소중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요, 40년 세월에도 잊히지 않는 폭력의 기억이자 자랑스러운면서도 아

픈 ‘아물지 않은 상처’라는 것을.

전일빌딩 10층에서 5.18관련 애니메이션을 보던 때가 생각난다. 시민들을 향한 사격 장면을 본 한 아이가 “엄마 저러면 국가가 뭐라고 안 해?”라고 물었다. “국가가 한 거야?”하는 엄마의 대답이 이어지자 “뭐?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가만히 있어?”하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반문했다. 결국 대화는 “대통령이 한 거야?”라는 짧은 대답으로 끝났지만 참혹한 장면 뒤에 이어진 아이의 질문이 국민을 향해 겨냥됐던 총구를 꼬집는 것 같아 씁쓸했다. 어쩌면 아이의 눈으로도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국가 폭력의 실재였기에 시민들 가슴속에 더 생생히 기억된 것이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사실 광주가 가진 상처의 성격을 단순히 국가 폭력에 의한 것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오랜 기간에 걸쳐 받았던 오해와 핍박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지난달 12일 발포 명령자와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 등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출범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활동 기간에 제한이 있고 수사권이 아닌 조사권만 가졌다는 점에서 우려가 따른다. 위원회에만 진상 규명의 부담을 지울 수 없는 이유다.

광주에 머무르며 얻은 깨달음이 하

나 더 있다면 시간은 그저 흐를 뿐이라는 것이다. 흔히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말을 하는데 5.18이라는 말에 멈추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그 말의 모순을 일깨워주었다. 시간은 그저 흐를 뿐이며 상처를 해결하기보다는 단지 그 위를 덮듯이 지나는 것임을 배웠다. 일례로 5.18을 배경으로 하는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는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는 말이 나온다. 장례식은 죽음을 매듭짓는 일인데 그러지 못해 당신의 죽음이 아직 내 일상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구절이다. 이때 소설 등장인물은 불과 얼마 전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어간 광장 분수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무너진다. 그저 흐르며 아직 딱지 앓을 기미도 없는 상처를 덮으려는 시간에 대한 분노와 슬픔 때문이었을 것이다. 광주의 상처를 시간에만 맡길 수도 없는 것이다.

위원회에도 시간에도 광주의 상처를 말할 수 없다는 글에는 필연적으로 “그럼?”하는 물음이 따를 수 있겠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수혜자인 우리 역시 광주의 상처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대답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냥, “언젠가 5월의 광주를 걸어보라”는 말을 전하고자 한다.

만평 - 세월은 흘러도 산천은 안다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2)

발행인 한군태 | 편집인 남운재 | 편집장 김지원 | 제작/인쇄 중앙미디어디자인(주)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기흥)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역삼로 1732(서현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 자치회비 50% 이상 반환, 양 캠퍼스 총학생회 반응 엇갈려

국제캠 “등록금 재논의 요구하며 자치회비 재논의 않는 것 모순”  
서울캠 “학교 측과 학생자치기구 같은 선상에 놓기 어려워”

김창호 기자 k.c\_hoxx@khu.ac.kr

국제캠퍼스(국제캠) 학생자치기구가 전체 자치회비의 50% 이상을 돌려준다. 국제캠 총학생회(총학) 양성민(원자력공학 2015) 회장은 지난달 16일 진행한 ‘코로나19 현황 브리핑’에서 “자치회비 중 최소 50% 이상을 반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치회비는 총학, 동아리 연합회, 응원단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가 복지사업 및 공약이행, 행사 등의 학생자치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이다.

이날 양 회장은 “학교 측에 등록금

에 관한 재논의를 요구하면서 자치회비 운용에 관한 재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판단했다”며 자치회비 반환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캠의 2020학년도 1학기 오프라인 행사를 전면 연기했다”며 “이에 최소한의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예비비를 제외한 50% 이상의 금액을 반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캠 학생자치기구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13일 국제캠 제14차 중앙운영위원회의에서 ‘자치회비 반환 진행에 대한 최종안’으로 의결돼 국제캠 학생

자치기구 대표단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자치회비 반환은 1학기 예결산이 끝나고 올해 8~9월 중 일괄 시행될 예정이다. 금액은 자치회비의 50%인 4,750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며, 2020학년도 1학기 자치회비 납부자들 각자가 구글폼 링크를 통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도 관련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서울캠 학생자치기구 측은 사실상 자치회비 반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캠 최원성(생물학 2016) 총학생회장은 “SNS상의 여론만으로 자치회비 반환을 결정하는 것은 선부르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학우 분들의 공식 요청, 요구가 모이면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죽

제나 간식 사업 등의 행사 부채를 이유로 자치회비를 반환하는 것은 무리”라며 “오프라인 행사를 취소한 만큼 각 단위에서 학생자치를 위해 필요한 행사 등을 고민하고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등록금과 자치회비의 관계에 대한 양 캠퍼스의 시각차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제캠 총학은 등록금 재논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회비 운용에 대한 재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서울캠 총학은 지난달 27일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등록금은 대학에 내는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이고, 자치회비는 자치조합 활동에 대한 지지로서 모인 활동금”이라며 “학교 측과 학생 간의 관계와 학생자치기구와 학생 간의

관계를 같은 선상에 놓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예년과 같은 자치회비 사용은 오프라인 행사 취소로 집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결산 공개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전반기 동안 시행된 바 있는 축제, 시험 기간 간식 사업 등은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두 취소된 상황이다.

또 “예산과 사업계획을 별도로 확대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및 의결을 받았으며, 매달 결산을 공개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교육과 자치활동을 어떻게 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자치회비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회기동 임대료 인하 캠페인 시작 ‘동참해주실래요?’

이지민 기자 delicado@khu.ac.kr

청년 중심 지역사회단체인 ‘회기동 사람들’과 ‘이문모아’, 그리고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가 회기동 임대료 인하를 위한 ‘우리동네 사장님 파이팅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달 20일 서울캠 정문 앞에 ‘우리동네 사장님 파이팅 캠페인’ 현수막이 설치됐다. ‘동참해주실래요?’라는 멘트가 적힌 현수막에는 임대료 인하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포장 및 배달이 가능한 가게들을 지도로 제작하는 포장 배달지도 만들기 활동도 진행한다. 상점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 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일도 계획 중에 있다.

해당 캠페인을 제안한 후마니타스 칼리지 우대식 교수는 “주변 상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보고 캠페인을 제안하게 됐다”고 전했다. ‘우리동네 사장님 파이팅 캠페인’이라는 명칭에 대해선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하에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이에 맞게 이름을 지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캠페인이 임대료 인하와 상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지만, 실제로 그러한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지역사회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 지지할 수 있는 관계의 시작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 교수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는 ‘회기동 사람들’과 ‘이문모아’는 캠페인 시작에 앞서 서울캠 총학생회의 도움을 받아 학생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 바 있다. 현재는 지리학과, 경영학과, 식품영양학과, 조리산업학과 등 약 15명의 재학생이 주축이 돼 함께 활동하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임창민(언론정보학 2014) 씨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이 주고객인 우리학교 일대 소상공인들은 더욱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러한 생각과 캠페인의 취지가 잘 맞아 참여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배달지도 제작을 위해 방문한 가게의 사장님들이 반겨주셔서 기분이 좋았다”며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같이 힘을 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타 학교에서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한창이다. 지난 8일 교내 임점 업체의 임대료를 일정 기간 인하 또는 면제하겠다고 밝힌 학교는 경기대와 인하대, 한국해양대, 한양대 등이다. 해당 학교들은 온라인 수업 장기화로 대학생 손님이 줄어 매출 부진을 겪는 업체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캠퍼스 정문 앞에 ‘동참해주실래요?’라는 멘트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사진=이지민 기자)





5. 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집

5. 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집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사진 르포



1. 5월 시민행진  
5월 시민행진에서 열사들의 얼굴을 딛 인형과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2. 금남로  
금남로를 비롯한 광주 시내에는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현수막과 포스터들이 가득 걸려 있다.
3.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코로나19 사태로 기념식 참여가 제한돼 거리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기념식을 보고 있다.
4. 대인시장  
시민들에게 주막밥과 생필품을 제공했던 5.18민주화운동 당시를 뚜렷하게 기억하는 대인시장 상인들.
5. 전일빌딩  
폭력집압 증거인 탄흔이 남아 있는 전일빌딩은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흔 번째 5.18, 마흔 번째 행진곡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김수혁 기자 sherik@khu.ac.kr  
박혜림 기자 apricot12@khu.ac.kr

#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대학주보는 광주를 찾아 특별취재를 진행했다. 지면에 실리지 않은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대학주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올해 5월, 광주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많은 행사가 열렸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확산 예방을 위해 규모가 축소되거나 진행 계획이 변경되기도 했지만 5.18의 의미를 되새기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마음만은 다르지 않았다. 5월 18일을 이틀 앞둔 16일에는 5.18 민주항쟁 기념행사위원회 주관으로 ‘오월 시민행진(시민행진)’이 진행됐다. ‘40년 전 그날과 오늘의 사람들’이라는 부제를 단 이 행사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현상화해 제작한 대형 인형들이 시민들과 함께 광주 시내를 행진했다. 시민행진의 출발지이자 도착지였던 ‘5.18민주광장’에서 금남로를 따라 멀리 떨어진 곳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이 자리하고 있다. 기록관 1층 전시실, 40년 전 5월 광주에서 스러져간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다. 그들 스스로 사랑도 명예도 바라지 않고 나아갔을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잊지 않고 함께 해야 할 이름들이다.

동자는 간 데 없고 깃발만 나뉘며

광주에서 만난 택시기사 유정균(55) 씨는 “그 당시 광주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들 5.18의 증인이라고 봐야 한다”

고 말했다. 그의 말 그대로 광주에서 만난 시민들은 저마다의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던 1980년 5월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여줬다. 정영숙(68) 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에서 군인들이 누군가를 구타하고 차에 실어 가는 광경을 봤다”면서 “흔비백산해 자전거도 버려두고 집으로 도망쳤다”고 말했다. 천정이 있는 합평으로 가려고 했지만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나설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도 정 씨는 피를 뒤흔든 천을 끊어 담장 밖으로 내밀었다. 그는 “잘못 없는 어린 학생들이 계속 두들겨 맞고 어딘가로 끌려가는 데 뭐가라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정범수(74) 씨가 처음 들려준 것은 도청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정 씨는 “운전자가 총에 맞아 조종할 사람이 없어진 차가 방향을 잃고 달려가면서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벌어졌다”고 회상했다. 정 씨는 “시위대를 위해 시장 상인들끼리 돈을 모아 빵과 우유 등 식량을 사서 나눠주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 방금 전에 지나가며 봤던 학생들이 쓰러져 있었다”면서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시장 할머니들도 다들 나서서 쫓기는 학생들을 감춰주곤 했다”고 말했다.

1980년 조선대 신입생이었던 임석(60) 씨는 “데모하며 쫓기고 뛰어다닐 때 길에서 다가와 물 담긴 주전자를 내밀던 분들이 아직도 많이 생각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도시 곳곳에 계엄군이 휘두르는 폭력과 그로 인한 혼란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저마다 다른 삶을 살던 광주 시민들은 차츰 모두가 모두의 동지가 돼 갔다. 서로 기대고, 막아주고, 일으켜 세워주었던 동지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제는 아무런 말이 없이 영원 속에 누웠지만, 누군가는 흐트러짐이나 그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기억하고 그 날을 잊지 않으면서 마흔 번째 5월을 살아가고 있었다.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올해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은 국립 5.18민주묘지가 아닌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희생자 유족들을 비롯한 400여 명의 제한된 인원이 참석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은 광범한 사람들의 광범한 희망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며 만들어진 것이다”라며 “광주 시민들의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과 나눔이 계엄군의 압도적 무력에 맞설 수 있었던 힘이었다”고 말했다.

기념식이 열린 5.18민주광장은 옛 전남도청과 상무관 사이에 있다. 현재 전 시관으로 사용 중인 옛 전남도청은 계엄군에 맞선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이고, 상무관은 사망한 시민들의 시신을 임시로 안치했던 곳이다. 40년 전의 신랑을 사서 나눠주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 국가폭력을 반성하고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되새기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무장 헬기에 의한 기총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조 비(60) 씨는 “데모하며 쫓기고 뛰어다닐 때 길에서 다가와 물 담긴 주전자를 내밀던 분들이 아직도 많이 생각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도시 곳곳에 계엄군이 휘두르는 폭력과 그로 인한 혼란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저마다 다른 삶을 살던 광주 시민들은 차츰 모두가 모두의 동지가 돼 갔다. 서로 기대고, 막아주고, 일으켜 세워주었던 동지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제는 아무런 말이 없이 영원 속에 누웠지만, 누군가는 흐트러짐이나 그들의

광주 시내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불꽃 부조가 새겨진 동근 석조물을 발견할 수 있다. 그곳이 5.18민주화운동 시작지임을 알리는 표지석이다. 술한 음해와 왜곡에도 광주의 ‘산천’은 진실을 품고 방문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5.18에 관해 묻는 질문에 많은 시민들은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사실의 조각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올해 활동을 개시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서로 엇갈리는 대답을 들려주었다. 이재환(63) 씨는 “이전에는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고 본다”면서 “남아있는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남(65) 씨는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지만 크게 낙관적인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정 모(69) 씨는 “그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만 이제는 지극지극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책임자 처벌이나 진상규명을 말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이뤄질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은 “너무 오래 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다(justice too long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말을 남겼다. 진 ‘광주사태’로 불리며 폭동으로 때도 당했다. 하지만 그날의 진실을 기억하고, ‘오월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이들에 의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복권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다. 80년 광주에서 잠시 좌절된 민주화를 향한 열망은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져 결실을 맺었다. 5공화국이 종식된 뒤인 1988년 국회에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설치돼 당시 광주의 진실이 처음 전국에 공공연히 알려졌다. 문민정부 시기인 1994년 12월에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신군부 주요 인사들을 반란 및 내란에 관련된 혐의로 처벌하고 이어 1997년, 5월 18일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했다. 뿐만 아니라 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복권, 국립 5.18민주묘지 조성 등도 이뤄졌다.

그러나 숙제는 아직 남아있다. 진상규명위는 근거 법률에 따라 5.18 당시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사망, 상해, 실종, 양매장 사건 규명에 나선다. 그에 더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직의혹사건과 최초 발포 및 집단발포와 계엄군 행기 사격의 책임자와 경위, 행방불명자의 구체적인 규모 및 소재, 학살지와 양매장지의 소재 파악과 유해 수습을 위한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여전히 만연해 있는 5.18에 대한 왜곡과 사실 부정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5.18을 ‘북한이 사주한 폭동’이라고 주장해 온 극우논객 지만일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올해 5월 18일에도 현충원을 찾아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최근에는 극우 유튜버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은 “너무 오래 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다(justice too long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말을 남겼다. 진 ‘광주사태’로 불리며 폭동으로 때도 당했다. 하지만 그날의 진실을 기억하고, ‘오월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이들에 의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복권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다. 80년 광주에서 잠시 좌절된 민주화를 향한 열망은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져 결실을 맺었다. 5공화국이 종식된 뒤인 1988년 국회에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설치돼 당시 광주의 진실이 처음 전국에 공공연히 알려졌다. 문민정부 시기인 1994년 12월에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 “내게 대학생 친구라도 한 사람 있었다면...”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의 일기에 등장하는 구절이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야간 시간대 교육을 제공하는 ‘야간 학교’의 졸업 말인 야학, 그중에서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야학은 전태일 열사의 죽음 이후 서울에서 본격 태동하기 시작했다. 국한문을 혼용하던 시대에 노동 관련 규정이나 법규, 정치사회 이슈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노동자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였다. 1978년 광주의 변두리 열악한 지방공단 주변에서 등장해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했던 ‘들불야학’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우리신문은 당시 전남대 독어독문학과 학생으로 들불야학 활동에 참여했던 임낙평(63세) 씨를 만나봤다.

‘들불’이라는 이름은 당시 유행하던 소설인 유현종의 <들불>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낙평 씨는 “1978년 당시 유신군사 독재체제 아래 언론과 학문,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되고 노동3권도 허용되지 않는 시기였다”며 “야학 활동을 통해서나마 이를 극복해보자는 결의로서 동학을 연상해 ‘들불’로 이름지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현종의 소설에서 <들불>은 ‘들난에 반치는 불길’이라는 뜻으로 사용돼 민중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5.18민주화운동과도 닮아있다.

그런 의미에서 임 씨는 “야학도 학생운동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당시 야학 활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로 야학 활동을 통해 정치사회적 개혁 과정은 민중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또 “야학에서는 가르치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배운다는 의미에서 교사 아닌 ‘강학’이라 불렀다”며 “야

학에서 노동자들은 정치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초보적인 내용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노동 현장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야학이 학문과 현실, 학생과 노동자 사이의 공백을 메꿔주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임 씨는 활동 당시를 “학교를 다닐 때는 물론이고 스스로 방학도 반납하며 야학에 열중했던 고된 일상이었다”고 회상했다. 낮에는 강학 확보와 학생 모집, 교재와 학사운영 마련에 힘쓰고 야간에는 수업에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또 수업뿐 아니라 토론과 학생들과의 만남, 그리고 정치·사회·역사에 대한 공부도 함께 수행해야 했던 까닭이다. 그러나 그는 “활동의 고된보다 야학에 대한 공안 당국의 탄압이 더 어려웠다”며 “공안을 대변하는 대학으로부터 야학을 폐쇄하라는 유형무형의 압박이 계속됐고 사찰과 미행, 회유는 물론 때에 따라 야학에 참여한 강학들이 경찰에 연행돼 조사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야학을 정성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탄압이 이뤄지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임 씨는 “5.18민주화운동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윤상원과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그리고 야학 인근 주민들이 있어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었다”며 “야학 탄압을 이겨내며 갖춘 조직성이 있어 5.18민주화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임 씨는 “들불야학은 5.18민주화운동에서 홍보전선대 역할을 했다”며 그 대표적 인물로 투사회보를 들었다. 투사회보는 윤상원 열사와 들불야학 성원들이 마비된 언론을 대신해 제작한 신문이다. 그는 “윤상원은 민주화운동이 지속될 것이기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명칭을 ‘회보’로 지었다”며 “시민들에게 민주화운동 현장을 알려 조직적 참여를 독려하기



임낙평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운집한 사람들의 열기로 뜨거웠던 금남로 거리를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다.

“야학에서 노동자들은 정치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초보적인 내용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노동 현장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다”

“

위에 투사회보를 간행해 배포했다”고 탄생 배경을 밝혔다. 이어 “투사회보 간행 이전에도 들불야학 성원들이 민주화운동 중심지였던 옛 도청 부근에 참여 독려와 시민들의 분노를 담은 대자보를 붙였다”며 “집회 현장에 호소문이나 격문, 선언문 등의 유인물을 간행해 살포했는데 이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었다”고 덧붙였다. 지속적인 정보 전달과 호소로 민주화운동에 활기를 불어 넣는 역할을 했던 셈이다.

투사회보 활동과 관련해 임 씨는 “20대 마지막으로 임 씨는 온갖 탄압에 시달렸던 시간을 다시금 회상하며 “야학이나 유인물 간행, 투사회보 제작과 배포는 민주화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이었다”며 계엄포고령을 위반하는 일이었기에 참여하는 성원들은 그에 따르는 위험을 각오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두운 시대를 반드시 돌파하기 위해 우리가 이 일을 해야만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서술 퍼렇던 시대 속 청년들의 이야기를 맺었다.

“그때 당시 제작 상황을 이야기했다. 또 수 천 장을 인쇄하기 위해 밤을 새우기 일주였고 모든 기계들이 문을 닫아 물자를 조달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주인에게 호소해 종이를 구입해 제작하는 어려움도 따랐지만 초기부터 물자 조달부터 제작, 2인 1조로 배포하는데 이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야학에 대한 탄압을 극복하며 갖춘 조직성이 빛을 발한 결과였다.



연재기획 - 청년정치는 가능한가

소외받는 비서울 비대학생, “인서울 대학생만 청년?”

3부 서울과 대학이라는 경계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박창원 기자 macpark342@khu.ac.kr

연재 기획 - 청년정치는 가능한가

1. 청년은 없다  
2. 페미니즘이라는 단절  
3. 서울과 대학이라는 경계  
4. 그럼에도 불구하고

#. 조국 사태로 우리 사회는 ‘청년이 분노했다’며 떠들썩했다. 이를 두고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세대의 뇌관을 건드렸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우리사회가 이야기하는 공정성이 모두를 위한 공정성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능력주의는 능력 이외의 가치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을 지을 수 없다. 사실 그것은 서울과 대학만으로 대표된 ‘청년’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일지 모른다. 서울과 대학의 경계에서 청년의 범주에 소외된 이들에 주목해본다.

만연한 한국식 능력주의가 청년정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능력주의란 본래 ‘학력이나 학벌, 연고 따위와 관계없이 본인의 능력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공정성 신화’로 포장된 한국식 능력주의는 본인이 나고 자란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고려 없이 결과만 놓고 모두 본인의 노력으로 치환한다. 또, 결과로 노력의 양을 단정 지어버린다. 최근 언론에서 조국 사태의 불공정성을 지적한 바탕에는 ‘공정성 신화’로 포장된 한국식 맹목적 능력주의가 내재돼있다.

언론은 서울권 학생들의 목소리만 청년의 목소리로 인식했다.

작년 말 조국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며 그와 주변에서 무수한 의혹이 제기됐다. 그중 청년들이 분노했던 지점은 그의 자녀와 관련된 의혹들이었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고려대와 서울대는 각각 집회를 시작했다. 2019년 8월 23일 고려대에서 조국 당시 후보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같은 날 서울대에서도 진상규명과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교내시위는 9월까지 이어졌고 이어 연세대까지 집회에 참여했다.

이에 언론은 연신 학교에서 진행된 시위를 두고 청년들이 학교 대신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광화문·대학로 몰려나온 청년들 “이게 정의로운 나라인가”’(조선일보, 2019년 10월 4일) 등의 헤드라인으로 보도됐다. 또한, “20~30대 젊은 층이 촛불 정권을 자임한 집권세력의 특권과 반칙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문화일보, 2019년 10월 31일) 등으로 조국사태 불공정에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보도했다. 나아가 ‘밀레니얼 세대’라는 이름으로 불공정에 대해 분노한다는 기사를 냈다. 이처럼 언론은 작금의 청년을 불공정에 민감하게 반응한 세대라고 언급했다.

서울과 대학의 경계를 벗어난 청년 “나와는 큰 상관없는 이야기”

그러나 언론의 목소리에는 소위 ‘스카이’라 대표되는 ‘인서울’ 대학에 재학 중인 혹은 졸업한 사람의 목소리만이 청년의 목소리로 담기고 있다. 작년 12월 24일 세계일보는 ‘서울대 설문 “反문재인” 기류 왜?...소수의견과 다대표인가 보수화인가’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발행했다. 기사는 “서울



대 동문·교직원이 활동하는 ‘스누라이프(SNULife)’에 실시된 최악의 대통령 설문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위를 기록했다”며 “이에 전문가들은 일부 소수 의견이 과다하게 대표되고 있다면서도 과거에 비해 젊은 층이 보수화됐다고 진단했다”고 말했다. 비단 서울대뿐만이 아니었다. ““조국 감싸기냐”...뿔난 2030”(한국일보, 2020년 1월 14일)이라는 기사에는 청년의 목소리라며 고려대 커뮤니티인 ‘고파스’ 반응을 전하는데 그쳤다.

개인의 노력으로 단순 치환할 수 없는 구조적 격차 고려해야

언론에 비취졌던 청년의 분노는 모든 청년에게 동등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서울과 대학의 경계를 벗어난 이들에게는 동떨어진 사안으로 느껴질 뿐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 출신 A씨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 “지방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입시에 대해 알 길이 없었다”면서 “서울에 올라와보니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돼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기득권의 입시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과 논란은 이미 특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끼리만의 이

야기”라며 “나와는 큰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공정성 인식 조사를 봐도 마찬가지다. 우리사회에서 공정성은 출발선이 다름에도 본인의 능력만으로 결과를 평가받길 원한다는 모순적인 경향이 드러났다. 한국리서치의 정한울 여론분석전문위원은 2000년대 이후 국가적, 사회적 의제로 부상한 정의의 문제와 관련해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그중 <한국의 불공정 실태, 문제는 무엇인가?>에 따르면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조건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응답자 가운데 ‘부모의 배경’이 ‘매우 중요’에 68%, ‘약간 중요’에 24%가 응답했으며 ‘연줄’에 ‘매우 중요’에 60%, ‘약간 중요’에 30%가 응했다. 그러면서도 같은 조사의 <한국에서의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에서 ‘능력 및 노력별 보수차이’는 ‘클수록 좋다’에 과반이 넘는 66%가 응답했다. 아울러 경쟁의 부작용에 대해 62%가 ‘심각하다’고 응답하면서 ‘우리사회에서 경쟁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데 79%가 동의했다. 스티븐 J. 맥나미와 로버트 K. 밀러 주니어는 『능력주의는 허구다』에서 능력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은 요인 중 하나라고 비판한다. 그들은 “능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수많은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라 말한다. 아울러 이들은 지역에 따라 소득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능력주의의 숨겨진 한계로 지적한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할 때만큼 보수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책은 교육이 기회의 평등을 가져온다는 능력주의를 비판하며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를 언급한다. 부르디외는 어떤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알아야만 하는 집단의 가치관, 규범, 취향 등의 ‘문화적 자본’이 필요하며 경제력과 문화자본, 학력 같은 사회적 지위가 복합적인 격차의 공고화를 낳는다고 말한다. 또 하위 계층의 아이들은 문화적 자본의 부족으로 인해 교육시스템에 배제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한다.

맹목적 능력주의 벗어나 모두의 정의를 위해

차별과 모든 것을 노력으로 치환해 버리는 맹목적 능력주의는 청년세대에 내재화됐으며 그것을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한다. 전설적인 미국 미식축구 감독 배리 스워처는 본인의 불우한 시절을 회상하며 “어떤 사람들은 3루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자신이 3루타를 친 줄 알고 살아간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불평등을 단순히 “노력을 안 해서 그래” 혹은 “나는 노력을 했으니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당연해”라는 말로 환원하는 사고방식은 연대의 청년정치를 불가능으로 결론짓게 한다. 대신, 답론을 형성할 때 본인의 정의가 모두의 정의인지, 누군가는 그 정의에서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의식적인 성찰과 논의만이 청년정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2020-1학기 모자이크장학 신청안내 및 지급기준

장학명	모자이크장학
모자이크장학 포인트 인정 기준	•포인트 인정 대상기간: 2019. 12. 01. ~ 2020. 06. 14. 기간내 취득 실적단, 2019-2학기 포인트 기반(장·내역 제외) •신청가능 포인트: 최소 100,000포인트부터 최대 2,000,000포인트까지 •포인트 환산 장학금 규모: 100,000원부터 2,000,000원까지 (학기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포인트 환산기준: 1포인트 1원 •교내·외 타장학과 중복 수혜 가능 ※ 단, 일부 생활비 장학의 경우 중복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역으로 타 장학수혜시 모자이크장학 수혜불가 •포인트 인정 기준 - 모자이크장학 포인트 인정표에 의거하여 각 분야: 항목, 등급별로 취득한 실적으로 항목별 1개 등급만 인정 - 재학 중 취득한 실적만 인정(휴학 중 취득 실적 불인정) -포인트 인정 대상기간 내 취득 실적만 포인트로 인정 ※ 모자이크장학 포인트 인정 현황(항목, 등급, 포인트 내용)은 학기별로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장비 ① 온라인 신청 : 인포21 ⇒ 등록/장학 ⇒ 장학신청 ⇒ “2020-1학기 모자이크장학”, 신청하기 ② 서류제출 -제출서류: 취득한 실적 원본 ※ 원본대조필 후 사본제출 가능 -제출기한: 2020. 06. 15. (월) ~ 2020. 07. 20. (월) 17:30 -제출장소: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단과대학: 실적확인 포인트 인정 처리 •학생지원센터: 포인트 내역 검토 및 장학금 지급
	•지급일: 2020. 08. 21.(금) (학기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2020-1학기 모자이크장학포인트 인정 현황표]

※ 모자이크장학 포인트 인정 현황표(항목, 등급, 포인트 내용)는 학기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야	항목	등급	등급별 분류 기준	포인트	제출 서류	유의사항	
1학 랑	교내·외 경진대회 수상자	1등급	교외경진대회/ 공모전 수상	국제단위 3위 이내 입상 이상	500,000	수상 확인서 및 증빙 자료	· 소속 대학내에서 심사 후 등급 확정 · 국제단위, 전국단위, 시·도단위 구 분은 추가기간의 구분이라따름 (구분 미묘함 경우 추가기간의 확인 필요) · 단재전, 공동저작의 경우 포인트는 1/ n로 계산(재지자, 교신지자는 저작 율의 100%) · 교내의 경진대회 및 공모전 수상은 학 업/진로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전 년 생활체육활동 등으로 인한 수상에 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 장학금은 백관현학대내 실사 · 학기당 항목별 최대 1회만 인정 · 취득(개제)일: 수상실적 상장에 기재 된 날짜,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이 학술지소재로 인정
		2등급	교외경진대회/ 공모전 수상	전국단위 3위 이내 입상 이상	300,000		
		3등급	교외경진대회/ 공모전 수상	시·도단위 3위 이내 입상 이상	150,000		
		4등급	교내경진대회/ 공모전 수상	최우수상	100,000		
	우수 학술지 논문 게재	1등급	인문/ 사회/ 예체능	SSO급 학술지	2,000,000	학술지 동재 증빙 자료	
		2등급		한국연구재단 동재지, 국제 저서	1,000,000		
		3등급		한국연구재단 동재후보지	500,000		
		1등급		SO급 학술지	2,000,000		
		2등급	자연/ 의학 (공학 포함)	국제 저서	1,000,000		
		3등급		SO급 학술지	500,000		
	4등급		한국연구재단 동재지	200,000			
	5등급		한국연구재단 동재후보지	100,000			
2학 랑	전문 자격증 취득자	1등급	전문자격증 취득자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법무사, 세무사 자격증 취득자	1,000,000	자격증 취득 확인서	· 학기당 항목별 최대 1회만 인정 · 자격증 인정 기일 : 2019. 12. 01. ~ 2020. 06. 14. 내에 취득한 자격증
	국제 화 역 량	영어 성적 우수자	일반  스피킹	토익 930점 이상 / 토토픽(TOEIT) 110점 이상 뉴토픽스 462점 이상 / G-TELP level 1(75%) / IELTS 7.5이상	200,000	외국어 성적 증명서 사본	· 기소에 동일한 등급으로 외국어교과 학을 수혜한자는 제외 · 동일등급은 재학기간 중 1회만 인정 · 유학학기 취득자 제외 · 재학기간 중 동일한 외국어 학력 등급 향상 시 2학기전 신청 및 수혜 가능 ※ 단, 동일등급은 한 학기기간 1회만 인정 · 영어 학목은 토익, 토토픽, 텬스, G-TELP, 오픽(OPICs), 토익스피킹, IELTS 중백(점 분가제) · 2배인(이)항목은 DELF, FLEF 중백(점 분가제) (동일등급은 재학기간 중 1회만 인정
토익 850점 이상 / 토토픽(TOEIT) 100점 이상 뉴토픽스 382점 이상 / G-TELP level 2(75%) / IELTS 6.5이상				100,000			
영어 성적 우수자		일반  스피킹	오픽(OPICs) IM3 / 토익스피킹 : 160	100,000			

3	국제 화 역 량	독일어	1등급	독일어 성적 우수자	JLPT N1급 JLPT 75 이상	200,000	외국어 성적 증명서 사본	·외국인 및 재외국민 학생의 경우 외국 어 (외국거주지 언어)관련 어학시험 성적 불인정 ·외국/한문한자 성적증명서 인정 기 준: 2019. 12. 01. ~ 2020. 06. 14. 내에 취득한 성적 인정 ·외국어, 한문한자 성적증명서는 원본 으로 확인 받은 후 사본 제출
			2등급	독일어 성적 우수자	JLPT N2급 JLPT 540 이상	100,000		
			1등급	중국어 성적 우수자	HSK 6급 이상 / 신 HSK 5급 이상	200,000		
			2등급	중국어 성적 우수자	HSK 5급 / 신 HSK 4급 210 이상	100,000		
			1등급	러시아 성적 우수자	DELFC1 - C2	200,000		
			2등급	러시아 성적 우수자	DELFB2	100,000		
			1등급	러시아 성적 우수자	TORFL-2	200,000		
			2등급	러시아 성적 우수자	TORFL-1	100,000		
			1등급	독일어 성적 우수자	-Isac-Zertifikat-Deutsch B1 210점 이상 -Goethe-Zertifikat Deutsch B1 70점 이상	200,000		
			2등급	독일어 성적 우수자	-Isac-Zertifikat-Deutsch B1 180점 이상 -Goethe-Zertifikat Deutsch B1 60점 이상	100,000		
4	통계 회계 /세무	통계 회계 /세무	1등급	통계/회계/세무 우수자	DELE Diploma Superior(고급) / FLEX 듣기/읽기 901 이상 및 쓰기/말하기 227 이상	200,000	통계 회계 /세무 우수자	·통일등급은 재학기간 중 1회만 인정 ·휴학학기 취득자 제외 ·학맥별 1개 등급만 인정 ·IT, 한국사, 한국어 향록의 경우 재학기 간 중 통틀어 1회 28까지 인정 ※ 단, 통틀어 1회 인정 ·자격증 인정 기준 : 2019. 12. 01. ~ 2020. 06. 14. 내에 취득한 자격증 ·자격증은 원본으로 확인 받은 후 사본 제출
			2등급	통계/회계/세무 우수자	DELE Diploma Intermedi(중급) / FLEX 듣기/읽기 778 이상 및 쓰기/말하기 200 이상	100,000		
			1등급	통계/회계/세무 우수자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200,000		
			2등급	통계/회계/세무 우수자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1급, 정보처리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GTO 1-2급	100,000		
			1등급	통계/회계/세무 우수자	사회조사분석사 1-2급	200,000		
			1등급	통계/회계/세무 우수자	전산세무 1-2급	200,000		
			2등급	통계/회계/세무 우수자	전산회계 1-2급	100,000		
			1등급	통계/회계/세무 우수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200,000		
			2등급	통계/회계/세무 우수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100,000		
			1등급	통계/회계/세무 우수자	KBS한국어능력 2+급 이상, 국어능력인증(TokU) 2급 이상	200,000		
5	통계 회계 /세무	통계 회계 /세무	1등급	통계/회계/세무 우수자	KBS한국어능력 3+급 이상, 국어능력인증(TokU) 3급 이상	100,000		
			2등급	통계/회계/세무 우수자	KBS한국어능력 3+급 이상, 국어능력인증(TokU) 3급 이상	100,000		



# ‘낙인’이라는 무기를 가진 언론

교수칼럼

김민웅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베트남 전쟁이 한참이던 중에 터져 나온 <펜타곤 페이퍼(Pentagon Paper)>는 미국 연방정부의 비밀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펜타곤은 미국 국방부의 별칭이고 이 문서는 국방장관이던 로버트 맥나마라(Robert S. McNamara)의 지휘 아래 작성되었는데, 1945년에서 1967년까지 미국이 베트남에 어떻게 개입하고 움직였는지를 기록했다. 물론 비밀로 분류된 국가안보 문건으로 공개는 법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었다.

반면에 당시 격화되던 반전(反戰)운동은 <펜타곤 페이퍼>의 공개로 더욱 힘을 받게 되었다. 1971년 뉴욕 타임지와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 내용을 신자 낙스 정부는 즉각 공개금지 조치를 취했으나 연방법원에서의 치열한 법정 투쟁 끝에 언론이 승리했다. 여기서 보다 중요했던 점은 이들 언론이 <펜타곤 페이퍼> 공개를 통해 미국 연방정부의 거짓을 폭로,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렸다는 점이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미국이 베트남의 자유를 위해 싸운다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 전쟁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정부 엘리트가 주도한 침략전쟁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미국에 의한 베트남 전쟁은 더

는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언론이 진실을 말하는 것은 이토록 중요했다. 민주주의 역시 바로 이러한 언론의 역할로 시민들의 기본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연방대법원도 국가안보가 진실에 기초하지 않으면 도리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펜타곤 페이퍼>의 공개는 바로 이 문건 작성에 참여한 다니엘 엘즈버그(Daniel Ellsberg)에 의해 이뤄졌다. 그는 이 전쟁이 ‘범죄’라는 확신을 갖게 되자 자신이 법적 처벌(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진실을 알리는 것에 자기 운명을 걸었다. 그는 이후 무죄석방이 되었고 평화에 대한 기여로 여러 상을 받게 되었다.

언론이 권력을 비판하고 진실에 다가서는 용기를 갖지 않으면 시민들은 무지해진다. 하지만 언론이 그러한 기능보다는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며 맥락이 빠진 채 어떤 사안을 ‘사실’로 포장해서 알리게 되면 그 언론에 의한 희생자가 생겨나게 된다. 언론은 누구보다도 거대한 스피커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 자체가 권력이 되는 순간부터 언론의 발언권은 공포스러울 정도로 힘이 세진다.

이 과정에서 ‘낙인효과’가 생겨나고 ‘희생제’가 되풀이 된다. 언론에 항거해서 자신의 진실을 밝혀도 언론이 이를 다뤄주지 않으면 그는 이미 여론의 재판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사회적 소멸을 강요당한다. 그것은 일방적 매도다.

누군가가 그렇게 표적이 되어



다니엘 엘즈버그는 <펜타곤 페이퍼>를 공개해 미국 연방 정부의 거짓을 폭로했다. (사진=중앙일보DB)

‘혐오와 축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살해를 즐기는 사회’가 되고 만다. 역술한 사람이 자기 결백을 하소연해도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의혹의 제기 자체가 혐의를 확정하는 일이 되면 그런 사회는 그 누구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불행하고 위험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태를 막아내지 못하면 언론은 조지 오웰의 <1984>에 등장하는 ‘빅 브라더’ 행세를 하게 된다. 표적이 된 존재를 근거도 확실하지 않은 기사로 질타해 고립시킨 뒤 방어권을 해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사건이다. 이런 빅 브라더의 주장을 검증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빅 브라더의 지시에 복종하는 인간성이 파괴된 현실이 지속된다. 한바탕 희생제를 치른 뒤 또 다음의 희생자를 이어진다. 그건 어느 누구도 될 수 있다.

진실에 다가서는 능력은 따라

서 매우 중요하다. 앞 뒤를 살펴보고 좌우의 맥락을 짚어보는 능력은 왜곡된 주장에 휘둘리지 않는 기본 태도다. 아니면 권력이 된 언론이 설치한 무허가 재판소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 들여 공동 가해자가 되고 만다.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보통의 착한 개인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주도자’가 된다.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경고다. 생각을 박탈하는 언론은 분명한 악령이다. ‘낙인’이라는 무기를 함부로 휘두르는 자들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굴복하면 ‘노예의 시간’이 시작된다. 언론이 권력에 저항하던 시대는 지나고 언론이 권력이 된 시대에 ‘의식의 혁명’이 절실했다. 우리의 존엄성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 그건 ‘생각하는 힘’에서 나온다. 그런 사회에서 언론도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가게 될 것이다.

## 참여마당

최재식  
철학 2016



##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

우리 학교가 처한 여러 문제들을 가장 직관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어휘는 ‘돈’이다. 학교가 돈이 없다는 건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짜증나는 일이다. 돈이 없으니 수업이 안 열린다. 교강사들은 적정 인원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낡은 강의실에서 좋지 못한 기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보직을 받은 교수들의 경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부서를 굴려야 한다. 그러니 연구도 제대로 못한다. 임금 부담으로 인해 학교는 행정직원을 충분한 인원만큼 충원하지 못한다. 학교 직원들의 임금수준이나 복리후생수준, 적정 직원 수 대비 인원충원율도 낮아지고, 그만큼 노동 의욕도 떨어진다.

돈을 끌어올 수 있다면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쉬워질 것이다. 대학이 어디서 돈을 끌어올 수 있을까? 세 가지 방법이 떠오른다. 등록금 인상, 돈 많은 기업의 후원, 국고 보조. 그런데 왜 하필 각각의 방법들로 대학이 돈을 끌어와야 될까? 이 고민은 ‘대학이 무엇인가’, 그리고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한국의 대학들은, 심지어 사립대학이라 할지라도 상당한 규모의 국고 보조를 받고 있다. 국고 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한 사립대학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분명 정부는 대학을 어느 정도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고 있다.

이 모순은 어디에서 올까? 한국 교육기관의 역사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정부는 고도성장기 폭증하는 가정의 교육 수요와 사회의 고급 인력 수요를 공공영역에서 소화할 수 없었다. 정부는 사립학교 설립을 유도하고 민간 대학 인가를 쉽게 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과정에서 대학에는 공적 속성과 사적 속성이 모두 부여됐다.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 지지가 없었더라면 소위 한국의 ‘명문대’들은 지금의 지위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 대학은 사회 전체가 사회 진보를 위해 지탱해온 고등교육기관이다. 대학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대학이 기업화된다면 당연히 대학은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학은 사회 전체가 지탱해왔다. 당연히 대학은 사회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대학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대학에의 국고 보조를 확대하고 사학들을 공공의 영역으로 들여와야 한다. 그리고 사안의 당사자인 우리 학생들 또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학 운영에 참여해야만 할 것이다.

가정의 달 기념

“힘을 내요! 경희 동문!” 이벤트

경희의료원이 당신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기간 : 2020년 6월 30일(화) 까지

대상 : 경희동문 본인 및 가족

우대혜택 : 모든 건강검진 프로그램 50% 할인

문의 : 02-958-8711-3  
(경희의료원 본관 2층 동서건강증진센터)

[우대 프로그램 안내표]

	우대금액 (여성 기준)	프로그램 구성 (여성 기준)
기본건강검진	29.5만원	기초검사, 혈액검사, 정밀혈액검사, 호흡기계검사, 심혈관계검사, 소화기계검사 (위내시경, 복부초음파), 치과검사, 한방검사, 여성의학검사
그린검진 (30대)	52.5만원	기본건강검진+갑상선초음파, 유방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자궁경부암, 수면위대장 내시경, A형간염
블루검진 (40대)	67.5만원	기본건강검진+갑상선초음파, 유방초음파, 부인과초음파, 복부CT, 수면위대장 내시경
골드검진 (50대)	90만원	기본건강검진+관상동맥CT, 흉부CT,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유방초음파, 부인초음파, 골밀도검사, 수면위대장내시경

※홈페이지(www.khmc.or.kr)에서 더 많은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부터 본능 24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대학생의 권리!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신청기간 / '20.5.20.(수) ~ 6.18.(목)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하기  
※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가능

★1학기 소독민정액 계속 사용가능

신청기간  
신청기간  
'20.5.20.(수) ~ 6.18.(목) 18시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서류제출 및 기구원 동의  
'20.5.20.(수) ~ 6.23.(토) 18시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신청문의 1599-2000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www.kosf.go.kr 접속후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신청자 본인 인증을 위해 필요합니다.  
※ QR코드를 스캔하면 알림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서류제출 방법  
※ 신청 다음날 홈페이지에서 제출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장학금신청현황 > 서류제출에서 제출서류 확인가능



기획

# 비대면 강의 확대, ‘토론’ 중시한 후마 교육은 어떻게?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후마니타스 칼리지(후마) 재도약’이라는 이름으로 후마 개편안이 시행된 지 세 학기째를 맞았다. 개편안은 시행 초부터 학생들의 참여 보장 여부, 필수 수강 과목 교체 등을 이유로 논란을 샀다. 강의 내용의 개선과 수강신청, 그리고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제기된 미래 교양 교육의 방향성에 관한 문제다. 개편안의 본 취지대로 수업이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 구성원들의 엇갈린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 ‘세계와 시민’, ‘우사세’·‘시민교육’ 모두 아우르고 있다

당초 후마가 개편안의 취지로 제시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와 ‘시민교육’이 담고 있는 내용이 유사하다는 것과, 함께 교육할 때 시민권의 발전사를 통합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신설된 ‘세계와 시민’ 수업에 기존 수업이 50% 정도씩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토론회에서 밝힌 바 있다. 이영준 후마니타스 칼리지 학장은 “신설된 강의가 기존 강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를 반영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상당한 내용이 수정되었다”며 개편된 교육안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세계와 시민’을 수강한 일부 학생들은 강의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지난 학기 세계와 시민 과목을 수강한 안태욱(한의예 2019) 씨는 “강의계획서 상 기존의 ‘시민교육’ 수업과 커리큘럼과의 차이점을 느끼기 어려웠다”면서 “‘우사세’ 과목을 아울러 신설된 수업인 만큼 세계화와 관련된 실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데, 결국 기존의 시민교육과 유사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지구촌 사회에 대한 관심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 아쉬웠다”는 의견을 전했다.

실제로 동일 교수가 진행하는 ‘시민교육(GEB1301S02)’ 수업과 ‘세계와 시민(GEC1104S19)’ 수업의 강의 계획서를 비교한 결과, ‘헌법 속 시민권’, ‘시민권의 역사’, ‘생명권’, ‘언론의 자유’, ‘재산권’,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의 시민권’ 등 2주차부터 11주차까지의 수업 주제가 동일했으며, 학생들의 발표 수업이 진행되는 주차의 명칭만 ‘현장활동 발표’에서 ‘GCP(Global Citizen Project) 발표’로 달라졌다.

일부 강의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이영준 학장은 “개편된 교육안은 분명 이전 강의와는 다른 차별점을 지니고 있다”면서도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적으로도 시행된 바가 극히 드문 교육이기에 교수진도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교양 교육 설계에



참여한 고봉준 인가탐 PD 교수는 “만약 이전 강의들과의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는 바뀐 개편안에 따르지 않는 교수자나 강의 진행 능력의 문제일 수 있으며 반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답을 내놨다.

과거 ‘시민교육’과 ‘우사세’를 수강한 학생들 중 일부는 두 강의가 충분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며 아쉬움을 밝히기도 했다. 박민서(회계학 2017)씨는 “애초에 ‘시민교육’과 ‘우사세’가 비슷한 내용을 다뤘다고 보기 힘들고, ‘우사세’는 세계의 철학과 과학을 엮보는 수업으로 시민권의 발전사를 익히기 위해 준비하는 중요한 수업이라 느꼈다”며 “만일 신설된 수업이 기존 수업의 내용을 아우르지 못한다면 큰 아쉬움이 남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이 학장은 “‘우사세’는 직접 설계에 참여한 수업이고, 큰 애정을 갖고 있는 과목’이라며 “2022년까지 2019학번 이전 학생들의 수강을 위해 강의를 유지되도록 계획돼 있으며,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해 앞으로 배분인수 교과로 수강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의 유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 ‘주제연구’와 ‘성찰과 표현’, ‘글쓰기’ 수업에서 개선된 부분은

‘주제연구’ 수업과 ‘성찰과 표현’ 수업은 학술 에세이 작성 교육을 도입하는 등, 기존의 ‘글쓰기’ 수업과 달라진 교육안을 강의 계획서 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글쓰기2’ 수업을 수강 중인 황지현(한의예 2018) 씨는 “‘글쓰기2’ 수업이 ‘주제연구’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수강 중인 ‘글쓰기2’ 수업과 같은 커뮤니티를 사용하는 ‘주제연구’ 수업에서 동일한 수업내용이 진행 중인 걸 확인했다”며 일부 ‘주제연구’ 수업에서도 큰 개선이 없었음을

지적했다. 학술 에세이 작성을 배워야 하는 ‘주제연구’ 수업의 학생들이 여전히 소논문 작성을 배우고 같은 과제를 부여받는 등 개편안의 지침과 강의 현장의 현실은 달랐다. 두 강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두 강의 간의 학점 차이, 개편안의 실효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태호 글쓰기 PD 교수는 “전문성과 대중성을 접목하여 학술에세이를 작성하는 것이 새로운 목표였지만,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돼 기존에 설정 하였던 방식을 교수자마다 다르게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1학기가 마무리되면서 전면적인 평가와 함께 교육 목표와 방향, 내용과 형식에 대해 공유하는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줄어든 수강 인원, 수강신청 개선은 아직 요원

후마 재도약 사업에 포함된 변화 중 하나는 수강 인원의 조정이었다. 구성원 간의 활발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뤄진 변화였다. 고봉준 PD 교수는 “지난해 수강 인원이 줄어 실제로 토론을 하기에 수월했고, 학생들과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할 수 있어 만족스러운 수업이 됐다”면서 “각 학생의 발언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더 자주 토론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정이었다”고 밝혔다.

후마의 교양 강좌 수는 개편 이전과 비슷하거나 늘어났다. 다만 수강 인원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정비됐어야 할 수강신청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후마는 올해부터 수강신청 여건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캠과 국제캠의 후마 행정실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서울캠 후마 행정실은 답을 주지 않았고,

국제캠 행정실 “역시 이렇다 할 계획이 없다”며 “수강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학사지원과에 전달한 의견도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김민성 후마니타스 칼리지 대학생위원장은 “수강인원 조정에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수강신청이 더 어려워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개편안 이전 강의도 수강신청이 어려워진 것은 마찬가지다. 이번 학기 ‘세계와 시민’은 100개의 강좌가 개설되었지만 ‘시민교육’은 7개가 개설되었고, ‘성찰과 표현’은 110개의 강좌가 개설되었으나 ‘글쓰기1’은 15개 강좌만이 개설됐다. 진승재(경영학 2015)씨는 이와 관련해 “신청할 수 있는 과목도 많지 않았지만, 우수한 평가를 받는 강의는 수강신청 경쟁이 더욱 치열해 남는 강의를 들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 비대면 강의 확대, 교양 교육의 미래는

비대면 강의가 지속되면서, 활발한 토론 문화를 지향했던 후마는 또 하나의 도전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교수자들은 ‘ZOOM’을 통해 토론 수업을 진행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의견 교류를 이끌어내는 등 비교적 강의실 강의에 가깝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평가했다. 이영준 학장은 비대면으로 진행된 교양 강의에 대해 “현실적인 제약은 있지만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활용해 강의의 질을 높이고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비대면 강의가 집중 조명을 받으며 대학가에서도 온라인 강의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기반 교양 교육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성원 간의 의견

차가 있었다. 김민성 위원장은 “후마에서도 온라인 교육은 분명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교육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현장 강의와 같은 수준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의 문제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이영준 학장은 “후마의 교육은 현장에서의 인문학적 토론에 목표를 둔 만큼 온라인 교육의 확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번 사태를 통해 시간 제약의 극복 등 온라인 교육의 가능성을 시험해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의 사태 변화와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서 또 다른 시도를 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고봉준 PD 교수도 “온라인 교육의 확대는 대화와 토론에 중점을 두고 있는 후마의 강의들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만일 비대면 강의 상황이 지속되거나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더라도 비용 절감 등의 차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현 사태 이후의 가장 큰 과제로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학생과 후마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어놓았다. 이영준 학장은 “후마 대학생 위원회의 설치와 배움학점제의 실시 등은 모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였다”면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을 때 후마의 긍정적인 변화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김민성 위원장은 “후마 개편안의 시행이 가장 문제 됐던 까닭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독단적 진행이었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은 이미 충분히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를 귀담아 듣고 개선 등의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답하는 것은 학교와 후마에게 남은 과제”라고 답했다.